

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장 단 기 종 합 대 책

2002.2.20(수)

재 정 경 제 부
금융감독위원회
한 국 은 행

1. 가계금융부채 현황

□ 00년 이후 가계 금융부채가 급증

(조원)

	97말	98말	99말	00말	01.9말
가계금융부채	247.2	226.3	243.7	293.7	334.9
[증 감 액]	[32.3]	[-20.9]	[17.4]	[50.0]	[41.2]
(증 감 율)	(15.3)	(-8.4)	(7.6)	(20.6)	(14.0)

□ 기관별로는 은행과 카드사의 가계신용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나머지 금융권의 비중은 크게 축소

(구성비, %)

	96말	97말	98말	99말	00말	01.9말
은행	26.8	26.3	28.8	35.7	40.2	43.8
비은행	47.8	47.5	45.6	37.7	29.0	25.2
신용카드회사	9.5	10.1	8.7	10.9	17.7	19.5
기 타	15.8	16.1	16.8	15.8	13.1	11.5

□ 형태별로는 일반대출, 판매신용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주택금융 비중은 감소하고 현금서비스 비중은 크게 증가

(조원, %)

	97말	98말	99말	00말	01.9말
일반대출 [비 중]	129.6 [61.4]	111.9 [60.9]	131.9 [61.6]	157.1 [58.8]	190.8 [60.3]
주택금융 [비 중]	42.9 [20.3]	44.2 [24.1]	46.5 [21.7]	54.1 [20.3]	54.8 [17.3]
현금서비스 [비 중]	12.5 [5.9]	9.7 [5.3]	13.5 [6.3]	29.9 [11.2]	37.6 [11.9]
판매신용 [비 중]	26.2 [12.4]	17.8 [9.7]	22.1 [10.3]	25.8 [9.7]	33.1 [10.5]

2. 가계금융부채 증가원인

가. 수요자 측면

① 금리하락에 따라 소비자금융 등 가계의 자금수요 확대

② 주택구입·전세자금 등 부동산 관련 자금수요 증대

③ 실업대책 등으로 자영업자 증가에 따른 사업자금 수요 확대

* 자영업자(창업자 포함)는 대출절차의 편리성 등으로 사업자금의 상당 부분을 가계대출 형태로 조달

④ 사채 등 비제도권 부채상환 및 대체를 위한 제도권 금융부채 증가

	97중	98중	99중	00중	01중
평균대출금리(은행,%) ¹⁾	13.2	12.9	10.1	9.5	7.3
내구소비재출하증가율(%)	4.5	-27.4	48.0	5.1	4.8
아파트매매가상승률(서울,%) ²⁾	5.2	-14.6	12.5	4.2	16.8
아파트전세가상승률(서울,%) ²⁾	-1.5	-22.4	32.5	12.1	23.3
신설업체수(7대도시,개)	21,057	19,277	29,976	41,460	39,609
신규사업자수(전국,천명)	706	581	990	1,015	..

1) 12월중 평균 2) 12월상승률(전년동가비)

나. 자금공급자 측면

① 실물투자 부진 및 높은 기업부채로 인한 기업부문의 자금수요 둔화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여력 확대

- 금융기관의 영업전략이 가계금융 중심으로 변화

* 8대 시중은행의 금년 대출증가 목표(자료 : 매일경제)

· 가계 : 34.6조원, 중소기업 : 26.0조원, 대기업 : -1.1조원

② 기업금융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(종금사, 투신사, 은행신탁)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계정으로 자금이 이동

③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가계금융에 대한 예대마진 확대

④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취급 조건 완화

* 최근의 부동산담보 가계대출 취급조건 완화 내용

· 담보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 면제

· 담보가액을 실거래가로 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최고 90%수준까지 확대

· 주택담보에 대한 전세 가능액 차감범위 축소 등

⑤ 할부금융의 발달 및 신용카드 발급의 확대

* 카드 전업사의 공격적 마케팅,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도입등으로
00년부터 카드발급 건수가 크게 확대

	97중	98중	99중	00중	01중
M2 증가율(% , 평균기준)	19.2	19.0	27.9	30.2	15.7
은행수신(조원)	16.5	53.6	66.6	92.0	54.6
종금·투신·신탁수신(조원)	35.5	54.2	-56.3	-100.9	14.7
대출중 가계대출 비중(%)	42.4	42.0	43.8	47.2	49.9 ¹⁾
가계와 기업대출 금리차(은행%p) ²⁾	1.76	1.97	1.91	1.37	0.51
카드발급 건수(백만매)	4.6	-3.7	-3.0	18.9	23.3 ³⁾

1) 01.9말 현재 2) 12월 평균금리 기준 3) 1~9월중(9말현재 81백만매)

3. 가계금융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

☐ 전체적인 가계금융부채 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

○ 가계대출/총대출 : 한국(01.9말) 49.9%, 미국(00말) 60.0%

○ 소득을 감안한 상대적인 가계부채규모가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편

* 가계금융부채/개인처분가능소득 비율 :

한국 87%(01.9말), 미국 107%(00말), 일본 113%(00말)

○ 은행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하회

* 가계대출 연체율 : 한국 (01말) 1.21%, 미국 (01.9말) 3.8%

※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금융 비중이 낮으나(한국 17.3%, 미국 72.8%) 실제로는 은행의 가계대출중 70% 정도가 주택담보대출로 되어 있어 단순히 주택부문 대출비중이 낮다고 외국에 비해 위험하다고 보기는 곤란

☐ 다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담도 있는 상황

○ 실물자산 선호경향, 금융자산 축적도 미흡등으로 금융자산 축적정도에 비해 금융부채가 많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

* 금융자산/부채배율 : 한국 2.52(01.9말), 미국 4.38(00말), 일본 3.97(00말)

○ 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늘어난 현금서비스등이 부담으로 작용

* 가계신용중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비중 : 99말 6.3% → 01.9말 11.9%

신용카드연체율 : 한국 (00말) 7.9% (01말) 7.4%, 미국 (01.9말) 5.1%

☐ 이와함께 가계대출에 대한 경쟁적인 여신심사 기준 완화*는 앞으로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 초래 가능성

*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조건 완화,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확대등

4. 향후 대응방안

◇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전략 채택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

- 아직 가계금융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

◇ 다만,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앞으로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도 가계금융부채가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갈 필요

-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등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불안요인에 대비케 하는 한편 부동산담보대출의 안정성을 제고
- 사전적으로 가계대출이 보다 건전해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가계의 부실이 현재화될 경우의 사회적 문제에 대비

(단기 대응방안)

- (i)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등을 위한 감독 강화
- (ii)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관행 개선 유도
- (iii)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
- (iv)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

(중장기 대응방안)

- (v) 개인의 신용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우량 신용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(Credit Bureau) 마련
- (vi) 소비자경생제도 도입 검토
- (vii)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
가. 단기 대응방안

(1)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등을 위한 감독강화(금감위)

① 과거의 경험손실률을 감안하여 대출종류별, 자산건전성 분류별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

* 현재 가계대출도 FLC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
과거 경험률에 근거한 예상 손실률보다는 감독규정에서 정한
최소 적립비율에 따라 적립

② 가계대출 관련 약정(예 : 마이너스대출약정)의 경우도 약정 한도액 만큼 우발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 계리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대상에 포함

③ 가계대출 규모, 연체율 추이, 수익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,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한 중점점검
- 유동성 문제(mismatch) 발생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·지도

(2) 신용카드부문의 건전성 제고(금감위)

①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향조정 검토

* 이익이 많이 나는 단계에서 충분한 적립을 통해 미래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

② 신용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발생비율(매월)·연체비율(분기)을 공시

③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실시

④ 카드사들이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수시 점검하고, 법규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엄중제재

⑤ 기 의뢰한 이용자보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

⑥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

* 예 : 과도한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유예기간을 두고 축소
카드사별 거래실적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

(3) 주택담보대출 관행 개선 유도(금감위)

①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향후 부동산시세와 경락률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

② 주택신용보증제도에 부분보증제도를 상반기중 도입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방만한 대출을 제어(제정부)

(4)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의 개선 추진(은행연합회)

○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(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)

(5) 신용불량위험에 대한 홍보강화(여신전문금융기관협회 등)

- 여신전문금융기관협회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자기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
- 협회 및 업계 직원이 참여하는 T/F를 구성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TV·신문등을 통해 홍보

나. 중장기 대응방안

(1) 우량신용정보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(Credit Bureau) 마련(재경부)

- 현재는 개인의 불량정보만 집중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소득 수준별 대출현황·지불능력등과 같은 우량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제도 도입

(2)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(금감위)

① 가계대출·부실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

- 부동산 가격동향, 가계대출 규모, 연체율 수준등을 감안하여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·운용토록 유도

* 예 : 외부변수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수준 상향 조정

②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점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담보대출에도 점차 확대토록 유도

(3) 소비자강생제도 도입 검토(법무부)

- 소비자강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개인부채를 법원중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마련
 - 봉급생활자 등 미래의 수입이 예상되는 자가 채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선고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(현재 도입 여부를 논의중)

(4)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
① 총액한도대출 배정기준등의 미조정을 통한 기업금융 확충 유도(한국은행)

-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은행별 배정시 중소기업여신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을 더욱 우대

* 02.1월 기시행한 사항 :

- 가계대출 평가비중(Δ) : 40% $\rightarrow$ 60%
-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가비중 : 30% $\rightarrow$ 40%

② 중시의 투명성 제고등을 통해 금융자금이 주식매입등을 통해 기업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(재경부)

③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조기 정비(재경부)

* 현재 국회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계류중

(5)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(재경부)

-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기존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중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일부 대책의 보완 검토